

한농연은 '농정주체' 중의 주체이다



농업정책연구소장
이 언 목

농정의 주체란 농정을 책임지고 발전시키 나가야 할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주된 책임자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나 부담을 지는 사람 또는 제재를 받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이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무나 부담을 지는 사람 또는 제재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식'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농림부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장관이나 공무원이 지는 부담과 받는 제재가 무엇인가? 국회의원과 언론, 농민으로부터 비판이 좁은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농정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지는 사람, 가장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농민이다. 농민은 농정에 있어서 적어도 절반이상의 책임이 있는 '농정주체'가 아닌가! 한농연회원은 농민 중에서도 농민이다!

쌀 협상, DDA협상이 예사롭지 않다. 다가오는 개방의 파고는 농정주체들에게 단단한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농업은 수년 내에 우리보다 10배, 100배 영농규모가 큰데다 농업기술에서도, 생산*유통시

스템에서도 앞서는 선진국과 거의 맞겨루어야 할지 모른다. 우리보다 1/10의 생산비로 비슷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국과 거의 맞겨루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엄청난 격차를 지금의 농업정책과 추진방식, 지금의 농민들의 자세로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의 농정성적표로 보아 아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나온 길과 거의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농업계가 '죽어도' 수행해야 할 과제는 개방의 파고를 넘어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촌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고, 우리 농민들이 자기 생업에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 있다. 농업이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부서의 반대와 "또 돈을 쏟아 붓는다"라는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0년간 119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 놓기까지 했다. 농업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종합대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은 개방의 파고에 휩쓸려 가버릴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고, 다음으로, 일반국민이 더 이상 “막대한 돈을 농업분야에 쏟아 붓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제 농민들은 농업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체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가 훈수하는 농정에 끌려가면서 불평하는 타성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나의 앞날에 대해 내 나름의 확신도 없이 끌려가면서 불평하는 자세를 이제 끝내야 한다. 농정이 잘못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로 오는데, 언제까지 남에게 내 운명을 맡기고 불평만 할 것인가. 남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준다 해도 내 마음처럼 써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농업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농민들이 농업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가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농민단체도 정부*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와 토론을 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니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며, 창의정신도 발휘되지 않는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도 돌아서서는 서로 불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책의 협의과정에서 대등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심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농민단체가 조직과 전문성을 가지게 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이제 농민들도 자신들의 바람과 의지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줄 내부조직과 역량을 갖추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농민단체가 상당한 조직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면, 턱도 없는 탁상행정이 없어지고, 정책의 집행은 투명해 질 것이며, 농업현장에 농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이 발휘될 것이다. 필자가 지난 7월호 한농연지에 기고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외의 대 농민서비스 기관 및 단체는 모두 농민단체가 이사회를 통해 지배하고 있기까지 하다. 물론 농협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지배체제를 통해 그들은 대 농민 서비스기관 및 단체가 농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정책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직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농업문제는 결국 농민만큼 고민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가 아닐까?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품목과 지역을 포괄하는 농민들의 대표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품목과 품목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농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경제*정치적인 위상도 농민 스스로 높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서정의 중앙회장이 전국대회에서 농업회의소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제 정부와 외부전문가들이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하고,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농민들은 불평하면서 끌려가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농업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창의와 자율 없이는 결코 농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아왔다. 농민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야 하는 의지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한농연이 중심이 되어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참여정부가 ‘참여’를 내세우는 진정함의 미도 이런 데에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한농연**